

국힘 “여당이 방화벽 될것”... 민주 “崔, 체포영장 지휘해야”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행 향해 다른 목소리...국힘, 정부 인사 추진 독려 민주 “尹 불법 저항 지원, 경제 망치는 길...경호처 통제를”

여야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경제 등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여당이 방

화벽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최 대행 체제 흔들기에 돌입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 등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최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근본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등의 정치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는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말로만 국정 안정을 외치더니 오히려 제 스스로 국정 불안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당장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오늘 재발의

다음주 표결...국힘 이탈표 최대화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대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구체적으로 제3자 중에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범위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 기밀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법안에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여야, 오늘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

정부와 여야가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의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8일 양당 관계자는 전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실무협의를 통해 국정협의회에 올릴 의제를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실무협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선 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공식 출범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송영길 ‘돈봉투’ 무죄·불법 정치자금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사조위에 유족 참여

김원이, 개정안 발의

항공참사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북포시) 국회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공사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 사조위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해 유가족 및 피해자의 의견을 사조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